



아동 기본법과 교육 무상화 논의 (2) —2024년 제214회~2025년 제217회 : 소수 여당의 국회 심의로부터—

와타나베, 아키오

梁, 洙京

(Issue Date)

2025-08-23

(Resource Type)

conference paper

(Version)

Version of Record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97585>



아동 기본법과 교육 무상화 논의 (2)

—2024 년 제 214 회~2025 년 제 217 회:소수 여당의 국회 심의로부터—

○와타나베 아키오(오사카 신아이 카쿠인 대학교)

키워드 : 초저출산, 아동 기본법·아동 미래 전략, 소수 여당·심의(숙의)·야당 협의,
교육 무상화

서. 과제와 방법: 가속화되는 초저출산((2024 년 출생아 수 68.6 만 명: 역대 최저, 합계 특수 출산율 1.15: 역대 최저)

후생 노동성이 공표(2025. 6)한 레이와 6 년(2024) 인구 동태 통계 월보 연계에 따르면, 2024 년 출생수는 68.6 만명(역대 최저, 최초로 70 만 명 이하로 내려감), 합계 특수 출산율은 1.15(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국립 사회 보장·인구 문제 연구소의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 중위 추계치를 밑돌며, 저위 추계 수준에 해당한다.

아동 기본법(2023 년 4 월 시행)·아동 미래 전략(2023 년 12 월 각의 결정) 하에서, 가속화되는 초저출산 사회를 염두에 두고 국회에서는 어떠한 양육·교육 지원 정책이 논의되었을까. 본 보고에서는 최근 1 년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본 뒤,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에서 이루어진 교육 무상화 논의의 경과와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국가 동향에 대해서는 공저 2024 『「아동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 종합 시책 221 례』 일본 표준에 상세 수록)

1. 집권 여당의 중의원 과반수 의석 상실과 「숙의」국회의 모색:테마별 야당 협의·합의 형성

제 214 회 국회(임시, 2024.10.1-09)에서 자유 민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総) 총재가 제 102 대 총리로 지명(회기 말에 중의원 해산)되었다. 총선거(2024.10.27) 결과, 자유 민주당·공명당은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잃게 되었다. 제 215 회 국회(특별, 11.11-14)에서는 결선투표에서 제 103 대 총리로 지명되어, 제 2 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였다. 거대 여당의 의석수에 의존한 강압적인 국회 운영에서 벗어나 「숙의(熟議)」가 강조되었으며, 주제별로 합의할 수 있는 야당을 찾아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제 216 회 국회(임시, 11.28-12.24)에서는 2024 년도 보정 예산안이 심의되었다. 제 217 회 국회(통상, 2025.1.24-6.22)에서는 2025 년도 예산안이 수정과 재수정을 거쳐 겨우 성립되었으며, 고등학교 무상화는 일본 유신회와의 협의로, 학교 급식 무상화는 입헌 민주당 등과의 논의를 통해 진전을 보였다. 이시바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2024 년 제 216 회)·시정 방침 연설(2025 년 제 217 회)은 아래와 같다.

【소신 표명】 소수 여당이 된 첫 국회에서, 이시바 총리는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 내각의 시정 방침 연설 한 구절을 인용하며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각 정당이 성실하게 정책을 협의하고,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비교 제 1 당으로서 자유 민주당과 공명당의 연립을 기반으로, 다른 정당의 의견도 정중히 경청하며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하게,

국민 여러분의 안심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표명하였다(의사록 제 216 중·본회의 제 2 호, 2024.11.29). 또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두 번째로, 인구 감소에 맞서 일본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것(지방 창생의 재가동, 성장형 경제로의 전환, 전 세대형 사회보장 구축)을 제시하였다.

【시정 방침】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는 앞으로 20 년 동안 1,500 만 명 가까이, 즉 2 할 이상 감소...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 인구 증가기에 만들어진 경제·사회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인재 회소 사회...연령이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귀중한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다시 말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국가 건설을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을 자산으로 존중하는 인재 존중 사회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 217 회 중·본회의 제 1 호, 2025.1.24 「『...』는 생략, 「／」는 단락 구분 표시)

2. 고교 무상화와 관련한 3 당 협의 및 심의의 특징: 소득 제한 철폐(2025-) 및 사립 학교 가산 확대(2026-)

민주당 정권 하에서 도입된 고교 무상화(2010-, 공립고 수업료 비정수／동액의 사립 학교 취학 지원금)는, 자유 민주당·공명당의 정권 복귀 후 소득 제한이 도입(2014-, 취학 지원금: 연수입 기준 약 910 만 엔 미만 가구 대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 급여금(급부 장학금)이 시작되었다. 더 나아가 사립 학교 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사립 학교의 실질 무상화가 실시되었다(2020-, 연수입 기준 약 590 만 엔 미만 가구 대상·전일제 39.6 만 엔 등). 아동 미래 전략(가속화 플랜)은 이 고교 무상화의 확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부분이 움직이게 된 것이다.

제 217 회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일본 유신회는 사립을 포함한 「소득 제한 없는 고등학교 무상화」의 실현을 주장하였다(217 중·본회의 제 2 호, 2025.1.27, 시정 방침 연설에 대한 질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유신회 공동 대표). 소득 제한 철폐에 가닥이 잡히자, 더 나아가 사립 가산분에 대해서 오사카(63 만 엔)을 참고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였다(217 중·예산위 제 11 호, 2025.2.17, 마에하라).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최근 전국 평균 수업료, 2024 년도 45.7 만 엔」을 기준으로 검토를 서두르고, 「안정적인 항구 재원의 확보와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혔다(동 회의). 2025 년도 예산안에 관한 3 당 합의 문서(2025.2.25)에 「『기본 방침 2025』의 책정까지 큰 틀을 제시한 뒤, 2026 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안을 도출하여 실현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소득 제한 철폐 등은 2025 년도에 선행 실시(고등학생 등 임시 지원금, 장학 급여금 확대 등)하고, 사립 가산분은 2026 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3 당 합의에 근거한 이른바 고교 무상화에 관한 논점의 큰 틀 정리」(자유 민주당·공명당·일본 유신회:검토팀, 2025 년 6 월 11 일)가 발표되었고, 이것이 「골태의 방침 2025」(2025 년 6 월 13 일 각의 결정)에도 반영되었다.

3. 학교 급식 무상화에 관한 심의 특징 및 야당 협의: 초등학교(2026-), 중학교(가능한 한

신속히 실현)

아동 미래 전략(가속화 플랜)은 학교 급식비 무상화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와 과제 정리 등에 그친 기재였다. 그러나 국가는 물가 상승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2024 년도 추가 경정 예산(2024.12.17 성립)에서 중점 지원 지방 교부금 안의 추천 사업 메뉴(0.6 조 엔)에 학교 급식비 보호자 부담 경감을 포함시켰다. 또한 문부 과학성은 『『급식 무상화』에 관한 과제의 정리에 대하여』(2024.12.27)을 공표하였다. 입헌 민주당은 일본 유신회·국민 민주당과 공동으로 학교 급식 무상화 법안을 제출했다(216 회 중의원 법안 제 25 호·2024.12.23, 문부 과학 위원회 2025.1.24 회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이시바 총리가 1 월에 방문해 지원을 약속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무료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서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격차 시정...젊은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장대한, 정말로 큰 뜻을 느낍니다. /일본에서도 가난하여 충분히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무상화는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한 뒤, 법안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217 회 중·본회의 제 2 호, 2025.1.27). 이시바 총리는 「(교육 보조·취학 원조로) 저소득 가구는 이미 무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아동·학생의 약 14%... 지난해 말에 정리·공표한 과제도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아동·육아 정책에 대해 효과 검증을 세심하게 실시한 뒤,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정도의 가벼운 응답에 그쳤다(동 회의). 그러나 학교 급식 무상화 역시 앞서 언급한 3 당 합의에 포함되었고, 급격한 전환 속에 초등학교는 「레이와 8 년도(2026 년)에 실현」, 중학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시행」한다고 명기되었다.

결. 초저출산 사회와 교육 무상화 논의: 가속화 플랜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되었다는 정부 인식 돌파

2025 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재무 대신은 「가속화 플랜의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제 217 회 중·본회의 제 1 호, 2025 년 1 월 24 일) 했다고 밝혔으며, 이시바 총리도 「36 조 엔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다」(제 217 회 중·본회의 제 2 호, 2025 년 1 월 27 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대해 「어중간한 대책을 조금씩 내놓을 시간적 여유는 (없다) 」, 「양육에 드는 비용은 사회가 책임져 준다고 젊은 세대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패키지를 가급적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동 회의, 마에하라(前原))라며 압박한 일본 유신회가 교육 무상화 논의를 주도한 것이 제 217 회 국회의 특징이었다.

【사사: 본 연구는 JSPS 과학연구비 22K02702 의 지원을 받음】